

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연구 중간간담회 결과보고

1. 회의개요

- 과제명 :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연구
- 내 용 : 연구 진행사항 보고 및 의견 수렴
- 일 시 : 2021. 8. 24.(화) 15:00 ~ 16:00
- 장 소 : 서울주택도시공사 6층 회의실
- 참석자 : 총 9명

구 분	성 명	소 속	직 책
내부 (SH)	천현숙	SH도시연구원	연구원장
	김형근		연구실장
	류재식	주거복지기획부	부장
외부 자문	김호기	서울연구원	부연구위원
	송영희	주택정책과 임대정책팀	팀장
윤일규	사무관		
이승혜	주무관		
연구진	오정석	SH도시연구원	수석연구원(연구책임)
	정윤혜		책임연구원

- 지출경비 : 금이십만원정 (₩200,000원)

구 분	내 용	금 액	비 고
자문비 (유형C)	200,000*1인	200,000원	2021년 외부위원 기술심의 수당 지급기준 적용 ※C등급, 대면출석 단가적용

※ 예산과목 : 판관.경비.기타일반운영비, 회의비.

2. 회의결과

1) 주요내용

-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평가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필요
 - 본 과업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임.
 - 기본계획에서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수행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한 과업내용 자체에 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으로 과업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음.
 - 차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차원에서 과업의 필요성이 있음
-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 추진의 변화
 -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주거복지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, 현재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업체를 모색 중
 - 현재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한계가 존재
 -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, PC나 모바일 등 노인계층은 비대면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, 다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릴 가능성이 높음.
 - 2020년도에는 6개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나,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로 프로그램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.
-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은 대책 마련이 필요
 - 일자리 상담사는 그 실효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속성이 필요하나, 금년도부터는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
 - 뉴딜사업과 연계했던 일자리 상담사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현재까지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, 사업구조상 SH공사가 다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인데, 직접운영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수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으로 현재 일자리상담사 프로그램은 표류중
 - 따라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이 프로그램을 추가하고, 기존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○ 주거복지프로그램 특성상 운영 및 실효성의 한계 발생

- 공동체 코디네이터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대표회가 구성되면 이후 공동체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나 현재 주민대표 구성 자체가 어려워 코디네이터 투입이 어려움.
- 특히, 혼합단지의 경우, 신규단지를 제외한 기존단지 내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

2) 향후 과제 방향 논의

- 코로나 19로 주거복지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, 실무부서에서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으나, 2021년 하반기에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임.
 -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, 연구범위 및 방법을 변경 제안
 - 과업변경(안)으로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연구에서 평가 틀(척도) 구축 연구로 전환하고, 차년도에 평가연구를 진행함
 - 평가를 구축연구로 전환할 경우, 주거복지프로그램별 입주자 척도 구성뿐만 아니라 실무자 및 운영자 측면에서의 프로그램평가 척도 마련을 추가하여 진행
- ☞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임대정책팀에서 최종 논의